

전기차 시대 왔는데...고장나면 수리할 곳이 없다

동네 카센터에서 전기 계통 수리 불가능해 "직영 서비스센터로 가라" 광주·전남 카센터 3000여개 존폐 기로...미래차 정비인력 양성 시급

광주·전남에서도 전기차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비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행거리·충전 인프라 등에 비해 '정비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동네 카센터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04대(광주 50대·전남 254대)였던 전기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6년 만인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3816대(광주 1531대·전남 2285대)가 보급됐다.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에 보급된 전기차도 1만 3540대에 달한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정비 기술 인력·업체 육성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동네 카센터에서는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차 고장·수리의 경우 동네 정비업체에서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차 제작사 지정 정비업체 등 수리를 맡길 곳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동네 카센터는 전기차가 입고 되면 무조건 직영 서비스센터로 갈 것을 권하며 수리를 포기하는 형편이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20여년간 정비를 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전기차들이 센터로 들어오면 워

셔액, 와이퍼·브레이크 라이닝·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외에 할 게 없다"면서 "그나마 차량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깔려있는 일부 외제 전기차의 경우 잘 못 견드려 고액의 수리비가 청구될 지 몰라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는 대신,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는 등 시스템 전체가 달라 정비사 실감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차량 모터 등에 고압 전류가 흘러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카센터가 전기차 수리를 꺼리는 이유를 꼽는다.

여기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이 줄고 엔진오일 교체할 일도 없다보니 전기차가 늘수록 일거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기차 육성 정책을 내놓은 만큼 카센터의 주요 수입원을 차지했던 엔진오일 교체 등 경정비 업무가 사라질 날도 머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당장,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보급률이 5%를 달성하는 기간(2015~2019년) 동안 정비업소 59곳(12.6%)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등은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이면 종합정비소는 21곳만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도 다르지 않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 중대형 정비업체인 자동차종합수리업체는 490곳, 전문정비업체

인 동네 카센터는 2602곳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만 1만 295명에 이른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동네 카센터가 문을 닫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대책도 미온적이다. 완성차 정비업체만을 대상으로 전기차 전문 정비소 확충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 동네 카센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놓지 못한 상태. 현재 1100개의 전기차 정비소를 2025년까지 약 3300개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의 오토큐 등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정비업체로 국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의원도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한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 대상이 연간 48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전기차 정비, 전기차 무상수리 보증기간, 낮은 전기차 정비수요로 인해 영세 정비업체까지 전기차 정비소를 축소하는 것은 시급조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국자동차정비업체협회 광주지부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보증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2~3년 후에는 일반 정비업체의 전기차 정비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정비업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전기차 전문정비 교육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정비업체의 줄폐업과 대규모 일자리 감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예 체험 신나오 25일 오전 광주 북구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열린 생태환경체험교육에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예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노총 조합원 채용 안하면 집회"...협박 맞다

타워크레인 지부장 등 3명 징역형

건설 현장 관계자가 민노총 노조원으로부터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협박일까. 민노총 조합원들은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총 건설노조 광주전남 타워크레인지부 A(56) 지

부장 등 간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지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B(53) 전남동부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53)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 등은 '민노총 조합원 채용, 타 노조 채용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공정의 작업을 중단하겠다. 다른 현장의 우리(민노총) (타워크레인) 기사들 전부 내리겠다", "앞으로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이 민노총 조합원들의 발언과 집회 등을 보며 타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는가 하면, 건설업체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현장 압박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발언을 듣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A 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사 편하게' 경찰에 전달했다면...알선 맞다

'혐의를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는 내용을 동료 경찰에게 전달했다면 '알선'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받은 계임장 업주 B씨의 청탁을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또 계임장 업주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나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위가 지인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해 다스리거나 편의를 도모해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금품제공자가 받은 형(벌금 150만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비대면 사교육 뜨는데 투자하세요" 12억 사기

학부모들 돈 가로챈 학원장 검거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교육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쟁긴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학원생 부모 등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장성군 교학원장 A(여·40)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 부모 10여명을 상대로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

면서 비대면 온라인 학습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투자비를 받아 쟁긴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광주에서부터 오랜 기간 학원을 운영해 온 A씨의 말에 속아 1인당 수백만~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와 빚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신협 조합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연리 16% 대 저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경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 및 증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된 데 따라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